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2022. 1. 25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

I. 평가 개요	1
II. 부문별 평가결과	7
1. 일자리·국정과제	9
2. 규제혁신	29
3. 정부혁신	35
4. 정책소통	42
5. 적극행정(가점)	47
III. 기관별 종합 평가	53
IV. 후속조치 계획	57

I.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45개(장관급 24, 차관급 21)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

□ 평가부문·방법

-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
 - *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3점)를 합산
- (평가방법) 평가부문별로 평가주관기관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상 평가 지표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 및 일반국민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평가부문	배점	평가항목	주관	평가단	일반국민
일자리·국정과제	65	100대 국정과제, 64개 주요정책과제 추진성과 등	국조실	100명	17,550명
규제혁신	10	규제혁신 성과·체감도 등	국조실	19명	2,027명
정부혁신	10	기관의 혁신역량 및 성과, 체감도 등	행안부	20명	7,566명
정책소통	15	국민소통 활동, 소통만족도 등	문체부	61명	17,550명
적극행정(가점)	3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성과, 체감도 등	인사처 국조실	10명	1,618명

□ 추진경과

- ('21. 2월) '21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립, 국무회의 보고
- ('21. 3월) '21년도 특정평가 세부지침 수립,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
- ('21. 4월) '21년도 특정평가 부처설명회(온라인 영상회의)
- ('21. 12월) 각 부문별* 평가 시행
 -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가점)

□ 2021년도 평가 결과

○ 기관 종합 평가 결과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규제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C	법무부, 여가부, 보훈처, 공정위	소방청, 기상청, 원안위

○ 정부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C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통일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적극행정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B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C	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일자리 · 국정과제 (65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45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평가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이거나 일자리 과제 추가 선정이 필요한 2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과제(64개) 선정, 국정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과제별로 ①정책효과에 대한 정성평가, ②이행노력·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 ③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도출
 - (정성평가)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10개 분과, 100명)이 평가
 - (정량평가) 연초 제시한 계획이행, 목표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
 - (만족도) 일반국민 17,550명 대상으로 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
- 기관별 국정현안 대응 노력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가점 도출

□ 평가지표

○ 정책추진 노력(25%), 목표달성도(25%), 정책효과(35%), 국민만족도(15%)를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이행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이행도) 연초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평가 • (성과창출 노력) '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기관장 노력', '갈등관리 노력'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이 추진한 노력 평가 	25%
목표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 	25%
성과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의도한 효과) 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장기적 효과) 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 	35%
	국민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5%

○ 국정현안 대응 노력 평가 (가점 5점 반영)

* 기관의 국정현안과 관련된 선제적 조치, 위기 적시대응, 혁신적 정책시행, 부처간 협업, 기관장 노력 등에 대해 평가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경제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
- 정부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백신 확보와 신속한 접종 등 방역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손실보상 등 포용적 민생회복에 주력
-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 변동에도 성공적으로 대응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탄소중립 목표상향 등 기후위기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화
- 앞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및 일상회복과 함께, 물가상승·가계 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

'21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성 제고

- 충분한 백신 확보(1.9억회분) 및 신속한 접종(접종완료율 83.0%), 방역·의료 역량 강화(PCR 검사역량 확대, 역학조사관 확충 등) 등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억제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515개소·1,030학급↑), 초등돌봄교실·마을돌봄기관 확충(496실·302개소↑) 등 보육·교육의 공공성 강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21.10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월 30만원), 국민연금 가입대상 확대(단기 근무 일용근로자 등)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 ILO 핵심협약 비준('21.4월)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하고, 5인 이상 쉼 사업장 주52시간 시행('21.7월) 등 근로여건 개선
- 재난지원금 지급(16.2조원),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손실보상 법제화('21.7월), 금융지원(380조원) 등 위기 극복과 포용적 민생회복에 총력
- 「스토킹처벌법」 제정('21.4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21.9월) 등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 기반 강화

❖ 위기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토대로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 준비

- G20 선진국 중 '20~'21년 평균 성장률 최고 수준(1.5%, OECD) 전망 등 **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시현
- 반도체(메모리 세계 1위), 자동차(생산량 세계 5위) 등 주력산업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역대 최고 수출(6,445억불),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295억불) 달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집중투자, 제2벤처붐 확산(역대 최대 벤처투자 65조원, 유니콘기업 15개, '21.11월 기준) 등 **혁신성장 기반 강화**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월), 온실가스인지에산제도 법적 근거 마련('21.5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확충**

❖ 부패방지과 국민권익보호를 추진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 강화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1.5월),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강화('21.10월), 범죄수익 환수대상 확대('21.12월) 등 **부패방지 제도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21.1월), **다중인명피해로부터 국민 권익 보호**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보상금 3%↑)하고, 흥범도장군 유해 봉환('21.8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21.11월) 등 **독립정신 계승 노력 지속**
- '국민비서(구빠)' 서비스 개시('21.3월),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21.12월),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체계 인정('21.12월) 등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21.7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1.10월)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확충**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연 5.3조원 지방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1,923억원),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21.8월),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확정('21.11월) 등 **지역위기 극복과 도약 기반 마련**
- 농·수산물 수출액 100억불 돌파(113.6억불), 조선산업 호황기 이후 13년만의 최대 수주량 달성(1,744만CGT)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 가속화**

❖ 국방력 강화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 노력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20~'21년), 우리 정상 최초 5년 연속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주도, P4G 서울정상회의('21.5월) 개최,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1.11월)시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30, 26.3%→40%) 발표 등 보건·기후대응 관련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 국방예산 확충('22년 54.6조원, 3.4%↑),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 도입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21.4월), 무기체계 국산화(한국산 우선구매제도 등) 추진 등 방위산업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대통령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21.9월),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1.6월) 등 통일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형성 노력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21.7월), 동해북부선 철도 복원('21.12월 착공), 민간 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100억원) 등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 美 기준금리 인상 등 국제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경제 대책을 강구하고, 물가 상승·가계 부채 등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 저탄소경제로의 이행 등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지역간 불균형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
-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교류·협력방안 모색 필요

4 국정목표별 평가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가책임 강화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 ❖ 노동 존중 등 '차별없는 공정사회' 조성 및 국민생명 보호 강화

주요 정책성과

- **코로나19 방역·의료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 역학조사·검역 강화* 및 중증도에 따른 병상 추가 확보·재택치료 병행 추진,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등 의료 대응체계 강화
 - * PCR 역량(일 2만 → 75만건), 신용카드 정보연계·전자출입명부 활용 등 역학조사 시스템 고도화(소요시간 12시간→5분), 역학조사관 확충('20년 80명→'21년 514명)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수단계 적기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백신 적극 확보 및 신속한 접종으로 예방접종 목표 조기 달성**
 - * 치료제 개발('21.9월) 및 EU승인('21.11월), 백신 임상3상 진입('21.8월)
 - ** '21.10.23. 전체 인구 대비 70% 2차 접종 목표달성 / '21.12.31. 2차 접종률 83.0%(3차 35.9%)
-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로 국민의 기본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10월),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노인일자리 82만개 창출** 등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 *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월, 만원) : ('17년) 20 → ('18년) 25 → ('21년) 30
 - ** 노인일자리 확충(누적, 만개) : ('17년) 47 → ('20년) 74 → ('21년) 82
 -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17.9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약 12.1조원 경감*
 - * 비급여의 급여화(7.5조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3.9조원), 한방·만성질환 등(0.7조원)
 -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 국민 : 일용단시간 소득기준 개정('21.7월), 고용 : 예술인('20.12월)·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 적용
- **보육·교육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교실(학교) 및 다함께돌봄센터(마을) 확충**으로 돌봄부담 완화
 - * '18~'21년, 국공립 어린이집 2,255개소('21년 +515), 국공립유치원 3,382학급('21년 +1,030)
 - ** 초등돌봄교실(실) : ('17년) 11,980 → ('20년) 14,278 → ('21년) 14,774(+496)
마을돌봄기관(개소) : ('17년) 4,189 → ('20년) 4,992 → ('21년) 5,294(+302)

-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완화
 - * 국가장학금 50%이상 수혜비율(%) : ('17년) 24.3 → ('20년) 32.1 → ('21년) 33.2
- 신혼희망타운 분양 확대, 주거 대출 지원강화 등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 * 분양(만호) : ('20년) 0.7 → ('21년) 1.7, 구입·전세 대출(조원) : ('20년) 5.7 → ('21년) 5.8

□ 노동기본권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 ILO 핵심협약 비준('21.4월)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시행,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21.2월, 경사노위 의결) 등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 강화
 - *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20.12월), 병역법 개정('21.4월)
 - **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마련, 활동시간 근로 인정, 임기 3년 보장 등
- 5인이상 소사업장 주52시간 시행('21.7월), 탄력·선택근로제* 및 모성 보호제도** 확대로 노동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및 출산·육아 지원
 - * 탄력근로제 기간 3→6개월 ('21.4월),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기간 1→3개월 ('21.4월)
 -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1.11월),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설('21.7월) 등

□ 국민생명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21.4월)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 추진, 소방 사고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사고·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 * 교통사고 사망자 : ('20년) 3,081명 → ('21년) 2,900명 잠정치 (약 5.9% ↓)
 - 화재 사망자 : ('20년) 365명 → ('21년) 270명(26.0% ↓)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도입*('21.1월) 등 해양사고 예방 강화
 - * 세계최초로 좌초위험 안내·전자해도를 제공, 해양사고 감소('20년 3,156건→'21년 2,662건)
- '2050 탄소중립' 법제화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 기반 확충, 석탄발전소 점진적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대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 * 탄소기본법 제정('21.9월), 2030 국가감축목표 상향('18년比 △26.3% → △40%, '21.10월)
 - **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목표: '24년 16 μ g/m³) : ('17년) 25 → ('20년) 19 → ('21년) 18

□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 기반 강화 및 국민 문화향유 인프라 확충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21.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및 「인신매매방지법」·「스토킹처벌법」 제정('21.4월)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 확립
- 생활 문화공간 확충*(도서관, 미술관 등) 및 온라인 박물관·미술관 전시 (241만명 관람)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확산**
 - * 문화기반시설(개소) : ('18년) 2,749 → ('20년) 3,014 → ('21년) 3,083
 - ** 프로그램 수혜자 : ('20년) 283만명 → ('21년) 290만명 (2.5%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마련

-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확보 필요**

* 중증병상 가동률 : ('21.10.31.) 45.1% → ('21.11.30.) 78.8% → ('21.12.29.) 67.4%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의료인력 확충 및 병상운영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로 전환 추진**

□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내 방역 강화

-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 학생 확진자 증가,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우려 확대**

* 2차 접종 완료율('21.12.31. 기준) : 인구 전체 83.0%, 18세 이상 93.3%, **12~17세 50.7%**

☞ **접종방식 다양화 및 정보제공 확대 등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학교 내 방역강화 대책 마련을 통해 조속히 추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층간소음 제도 개선

- 국민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층간소음 인정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관련 처리 절차(전화상담·현장진단 등)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현행 기준('14.6월 제정, 주간 43dB·야간 38dB)은 세계보건기구(WHO) 수면방해소음기준(30dB)보다 높으며, 현장측정 시 기준초과율은 7.9%('14년~'21.11월)에 불과하여 조정 필요

*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1.1월)을 수립·추진 중이나, 층간소음 보다는 공사장·도로·철도·항공 등 야외 소음 위주로 구성되어 층간소음 대응 한계

☞ **법정부적 대응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 및 층간소음 인정기준 개선 및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 등 대책 마련 필요**

□ 추락·끼임 산재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강화

- 산재 사고사망자 및 사고사망만인율은 감소 추세*이나,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감축을 위해 지속 노력 필요**

* 산재 사고사망자 및 만인율: ('17년) 964명, 0.52‰ → ('19년) 855명, 0.46‰ → ('20년) 882명, 0.46‰

** 추락, 끼임 사고 비율(%): ('17년) 48.5 → ('18년) 50.4 → ('19년) 53.0 → ('20년) 48.3

☞ **추락·끼임 방지시설 설치·교체사업 확대, 예방적 지도·점검·감독 강화, 민간 자율 안전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계도 추진**

더불어 잘사는 경제

- ❖ 위기 극복을 넘어 '경제 정상궤도로의 진입' 본격화
- ❖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 확립을 통한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

주요 정책성과

-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경제 정상궤도 진입 본격화, 대외 위상 제고**
 - '20년 역성장폭을 최소화($\Delta 0.9\%$, G20 중 3위)한 데 이어, '21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 '20~'21년 평균 성장률은 G20 국가 중 최고 수준 전망
 - * '20~'21년 평균성장률(% OECD) **한국(1.5)** vs. 미국(1.0), 호주(0.6), 일본($\Delta 1.4$), 이태리($\Delta 1.6$)
 -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반으로 무역강국(세계 8위)으로서 위상 공고화, 외국인 직접 투자실적**(FDI)도 역대 최대 달성
 - * 수출액(억불): ('19) 5,422 → ('20) 5,125 → ('21) 6,445(전년대비 +25.8%)
 - ** FDI(누적, 신고기준, 억불): ('19) 233.3 → ('20) 207.5 → ('21) 295.1(전년대비 +42.3%)
 - ODA 규모 확대('20, 3.4조 → '21, 3.7조(+8.3%)),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UNCTAD의 세계 최초 '개도국→선진국' 지위 인정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3대 신산업* 중심으로 시장 선점 및 생태계 강화 총력, 디지털 뉴딜 2.0 추진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반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 강화**
 - * (미래차) 수소차 점유율('16→'21.11월): 3.6→**55.9%**(세계 1위), 전기차 수출('16→'21.11월): 1.1→**13.4만대**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억불): ('16) 205 → ('18) 265 → ('20) 303 → ('21) **398**
(바이오) 수출액(억불): ('16) 45 → ('18) 84 → ('20) 139 → ('21) **162**
 - ** AI 공급기업수: ('19) 220 → ('21) 991 / 데이터 공급기업수: ('19) 393 → ('21) 1,126
국내 Data산업 시장규모(조원): ('17) 14.4 → ('18) 15.6 → ('19) 16.9 → ('20) 19.3
 -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이 경제 회복세 견인, 민·관 협력 강화 및 수출 물류대란 총력지원**을 통해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
 - * (메모리) 세계점유율(**58.9%**) 1위('21.1-3Q), (高부가선박) 세계 발주비중(**64.5%**) 1위 ('19~'21)
(자동차 생산량) ('16~'17년) 6위 → ('18~'19년) 7위 → ('20년~'21년) 세계 5위
 - ** 국적해운사의 임시선박 투입, 수출 바우처 지원, 대기업 운반선에 중기화물 선적 등

□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강화

- '제2벤처붐' 확산으로 역대 최대 벤처투자액* 달성,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규제혁신으로 유니콘 기업 대폭 증가** 및 기술창업 활성화***

* (벤처투자, 조원) : ('17) 2.38 → ('18) 3.42 → ('19) 4.27 → ('20) 4.30 → ('21.1~11) 6.5

** (유니콘 기업 수, 개) : ('17) 3 → ('18) 6 → ('19) 10 → ('20) 13 → ('21.9) 15

*** 기술창업(만개): ('17) 19.9 → ('18) 21.2 → ('19) 22.1 → ('20) 22.9 → ('21.10) 19.8

-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품혁신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인력난 해소 지원*** 병행

* 중기 전용 R&D(조원) : ('17)1.17 → ('18)1.54 → ('19)1.72 → ('20)2.31 → ('21)2.47

** 스마트공장 보급(개, 누적) : ('18) 7,903 → ('19) 12,660 → ('20) 19,799 → ('21) 25,039

*** '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채용 8.5만명 지원('21.11월, 누적 46만명),
'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인원 10만명 조기 달성('21.11월, 누적 50만명)

□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협력 모델 구축으로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 및 거래관행 개선* 유도, 공정거래 감시역량 확충 등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단체급식·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정보 공개 시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공개토록 하여 일감개방 문화 확산 유도

-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한 상생협력 확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상생모델**(상생형 스마트공장, 소부장 상생모델 등) 도입 등으로 '포용적 성장' 기반 강화

* ('19년) 56개사, 561과제 → ('20년) 106개사, 1,992개 과제 → ('21년) 164개사, 4,747개 과제(누적)

**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통한 K-방역 신속지원(삼성전자-풍림파마텍) : 단 1개월 만에 월 1천만개 이상의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 대량생산체계 구축

□ 고용충격 최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가동(25회), 고용·일자리 유지 및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대책*(120여건)을 추진하여 국가적 고용위기 극복**에 기여

* (고용유지) 8.1만개 기업, 88.8만명 근로자 일자리 유지('20~'21년, 순인원)

(공공·민간 일자리) '20년 158.5만개, '21년 145.6만개(~'21.11월) 일자리 창출

** 취업자수(전년대비, 만명) : ('17년)31.6 ('18년)9.7 ('19년)30.1 ('20년)△21.8 ('21년)36.9

- 16.2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손실보상 범제화(세계 최초)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지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민생경제 충격 완화

* 소상공인 1차(14.82조원)·2차(7.82조원) 금융지원, 소상공인·中企특례보증 18.8조원, 중소·중견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4.8조원, 만기연장 284.2조원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민생경제 지원 지속 필요

-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대외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 및 어려움이 여전**
- **비대면 소비 확대, 유통 플랫폼 진화** 등 영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민생경제 피해 회복지원 확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경제 지원 노력 지속 필요

☞ **디지털·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진출 지원, 시장정보 분석·제공**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병행 필요

※ 시장정보 및 상권통계 분석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추진중(~22.2) → 빅데이터 플랫폼화(~23)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참여 유도 필요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중간경로(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으나, **경제주체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 미흡**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 변화에 우리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강화** 필요

- 탄소중립은 산업부문의 변화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생활 속 **탄소저감 사례 발굴 및 홍보** 노력 병행 필요

□ 가계부채 관리 시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 필요

-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관리 부족**

* 은행권의 대출억제 과정에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상승, 우대금리 하락), 대출 축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 가계부채 위험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 필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

- ❖ 권력기관 개혁 추진, 부패방지 시스템 정비로 국가 신뢰도 제고
- ❖ 민생치안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권의 향상

주요 정책성과

□ 권력기관 개혁 지속 추진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 공수처 출범('21.1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안착 기반 마련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및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핵심 하위법령 시행('21.1월)
-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관행 개선*,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전국 경찰관서 인권전담부서 설치 등 검·경 조직 혁신 지속
 - * 별건범죄 발견시 : 인권보호관 검토 → 검사장 승인 → 대검 보고 이후 별도 부서 배당 등
 - ** 「검사징계법」 개정('21.1월)으로 검사징계위에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구성(9명 중 5명)
- 국가수사본부 출범('21.1월)으로 경찰수사의 책임성·완결성 강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월)을 통해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가 인권정책의 통합적 추진(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등)을 위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21.12월 국회 제출),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

□ 공직사회 부패방지 기반 마련 및 부동산 투기 등 중대 범죄 엄정 대응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1.5월), 「공직자윤리법」 개정*('21.6월, 10월)을 통해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기반 마련
 - * 부동산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확대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근절 기반 마련
-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 주재), 청렴사회민관협의회(사회각계 참여) 운영 등 반부패 현안 적극 대응을 통해 국가청렴도 지속 상승*
 - *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21.1월) 세계 30위권('17년 51위→'18년 45위→'19년 39위→'20년 33위)
- 대검 및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등을 설치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엄단 및 범죄수익 환수 추진*
 - * (대검) 투기사범 37명 구속 및 793억원 보전, (전국 청) 투기사범 16명 구속 및 282억원 보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1.1월) 통해 **사업장 인명피해시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21.12월)으로 **범죄수익 환수대상 범죄 확대**
* (사망사고 발생시) 하한형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 부과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탄력·지역안전순찰 등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활성화로 범죄율 감소 성과**(전년 대비 총범죄 11.1%, 5대범죄 13.3% 감소)
-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인력 확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중 관리, 아동학대 전담수사체제 구축 등을 통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효과적 보호****
* 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추가 운영('20년 14개서 → '21년 149개서) 등
** 전년 대비 △성범죄(강간·강제추행) 8.8% 감소, △아동학대 검거 116% 증가,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신변보호 건수 53.5% 증가(스마트워치·CCTV설치·주거지 순찰 등)

□ **적극적인 대내외 보훈정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삶의 질 개선 및 국격 제고**

- 「4·3사건법」 개정(21.2월) 통해 **제주4·3사건 희생자 피해보상 근거 마련**,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 기반 확보**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개보수 활성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완공**(21.11월)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확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속 추진**
- 20년 이상 **2만원 내외로 유지된 전상수당 4배 인상**(20년 2.3만원 → '21년 9만원), **국가 유공자 보상 강화**(보상금 3% 인상), **의료·안장시설 확충***
* 부산·광주재활센터 완공, 국립묘지 2개소 확충(제주호국원 1만기, 대전현충원 5만기) 등

□ **코로나 19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 정보주권 강화**

-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21.2월) 등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백신접종 등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21.3월)
*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 추진(21.9월, 국회제출)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21.12월~), 온라인 여권서비스 확대*, **격리면제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15.8만건) 등 국민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
* 이용건수 : '20년 대비 약 3.2배 증가(('20년) 10백만건 → ('21년) 32백만건)
-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21.12월)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 획득***
* EU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국내로 이전·처리 가능하여 디지털 분야 국제무역 활성화 기대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층간소음난동 사건(인천)·신변보호 대상자 사망사건(서울) 등 경찰의 현장대응 능력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등 민생치안 공백 다수 발생

☞ 경찰 채용·교육과정 개편, 경찰장비 인프라 개선 등 경찰관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대응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신변보호자 가족살해), 인공지능 식별사업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출입국 관리시스템) 등 개인정보 침해 지속 발생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활용사업 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

□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훈대상자 의료·요양 사업 정비 필요

- 보훈대상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지속 감소가 예상됨

* '17년 85.4만 → '18년 84.6만 → '19년 84.3만 → '20년 84.1만 → '21년 83.9만

☞ 의료·요양인프라 신규 건립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민간기관과 협력 강화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 도모 필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관련

-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법률구조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

* 법원·대한변협·예산당국 등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이견으로 입법절차 지연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관련 유관기관간 합의점 마련을 통해 조속한 피의자 인권향상 필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 자치분권 제도화 및 재정분권 추진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 구현
- ❖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농산어촌 복지 지원으로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확립

주요 정책성과

□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기틀 마련

- 중앙·지방 소통과 협력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21.7월)하고, 「지방자치법」시행(‘21.1월)을 통해 자치분권 가속화
 - *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기재·교육·행안부 장관 등)이 모여 주요 정책 등 논의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시행^{*}(‘21.1월) 및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 마련을 통해 지방권한 확대 강화
 - * 중앙부처 사무 400개 지방이양, 신규이양사무(87개)에 대해 비용 지원(1,549억원, 균특)
 - ** 13개 부처, 37개 법률, 262개 사무 이양(제정안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1.10월) 및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제정(‘21.7월) 등을 통해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청구 가능, 청구연령 하향 조정(19 → 18세) 등
 - ** 시범지역 현황(개) : (‘18년) 95 → (‘19년) 408 → (‘20년) 626 → (‘21년) 1,013

□ 재정분권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활력 제고

-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연 5.3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국세·지방세간 세입체계^{**}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
 - *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으로 연 4.1조원 확충, 지방소멸대응기금 연 1조원 지원 등
 - ** 국세·지방세 비율(%): ‘18년 77.7:22.3 → ‘19년 76.4:23.6 → ‘20년 73.7:26.3 → ‘21년(이후(잠정)) 72.6:27.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개정(‘21.12월), 지방세 체납률 관리^{*}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등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 지방세 체납률(%): (‘18년) 4.1 → (‘19년) 3.7 → (‘20년) 3.1 → (‘21년) 3.2(잠정)
- 「고향사랑 기부금법」제정(‘21.10월), 지역사랑상품권(21.6조원, ‘21.11월) 판매 지원 및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등 15.8만명 참여

- **지역산업 인프라 조성 및 도시재생뉴딜 추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 촉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1,923억원), 민간투자(1조7천억원), 스마트그린산단 추가 선정(3곳),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제정('21.8월) 등 지역균형 성장 도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속(21년 누계, 488곳 선정) 및 특별공모를 통한 도심내 위험건축물 정비사업 추진 등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기반 강화
 - * 선정 수(곳) : ('17년) 68 → ('18년) 100 → ('19년) 116 → ('20년) 117 → ('21년) 87
 -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로 입주기업 지속 증가*, 새만금 교통 여건 개선,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21.11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 * 입주기업 현황(개) : ('18년) 693 → ('19년) 1,425 → ('20년) 1,663 → ('21년) 1,949
- **농산어촌 복지서비스 강화 및 촘촘한 소득망 확충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
 -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복합적인 생활 SOC를 확충*하고, 교통 사각지대 농어촌(82개 군) 주민에게 버스·택시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 생활SOC 구축(누계, 개소) : ('18년) 624 → ('19년) 1,058 → ('20년) 1,311 → ('21년) 1,672
 - ** 농촌형 교통모델 이용자(만명) : ('18년) 194 → ('19년) 296 → ('20년) 482 → ('21년) 549
 - 국민쉼터 및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낙후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21년까지 250개소) 차질 없이 추진
 - * 자연휴양림/나눔숲 조성(누계, 개소) : ('19년)175/832 → ('20년)181/913 → ('21년)184/981
 - 쌀 수급 안정* 및 공익직불제 등을 통해 중소농 소득 안정, 재해보험 개선** 및 재해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로 피해 농가 신속 영농 복귀 지원
 - * 수확기 쌀값(10~12월, 20kg기준, 원) : ('18년) 48,392 → ('20년) 54,121 → ('21.10월) 55,355
 - **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개) : ('18년) 73 → ('19년) 78 → ('20년) 83 → ('21년) 83
 - *** 지원 단가 현실화율(%) : ('18년) 66 → ('19년) 72 → ('20년) 73 → ('21년) 83
- **수출기업 지원 및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부여**
 - 선박부족, 운임상승 등 전 세계적 물류대란 적극 대응*을 통해 물류난 해소, 수출기업지원·판로확대 등으로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불** 돌파
 - * 임시선박 투입(척/TEU) : (미주)61/152,483, (유럽)4/9,586, (동남아)19/13,197
 - ** 농·수산식품 수출액(억불) : ('17년) 91.5 → ('19년) 95.3 → ('21년) 113.6
 - 조선분야 13년만의 최대 수주량 달성*, 캠코·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16년) 이전 수준의 해운경쟁력 회복**
 - * 수주량(만CGT) : ('08년)1,739 → ('11년)1,330 → ('16년)131 → ('20년)314 → ('21년)1,744
 - ** 해운매출(40조원)·원양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지배선대(9,338만DWT) 등 달성 예상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마을공동체법」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 및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1월) 대비 후속조치* 마련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및 조례 제정, 기부시스템 구축 및 홍보 등

☞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고향사랑기부제 후속조치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

□ 종료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필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연차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나, 종료사업(’20년, 4개소, ’21년 9개소)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는 미완료

☞ 종료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

□ 어촌 소멸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농촌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어가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고령화율도 전국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등 어촌 소멸 우려

* 어가인구(만명) : (’19년) 11.4 → (’20년) 9.7 / 고령화(’20년기준, %) : 전국 15.7, 어촌 36.2

☞ 인구이동 및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긴밀한 협력 필요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21.11월) 등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기관별로 역할이 분산되어 있음

* (국토부행복청)행복도시기본개발계획, (기재부)예산·총사업비 검토, (국회)설계, 건축공사 등

☞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건립 규모나 예산 편성 등에 있어 관계부처·지자체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필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정상외교 및 국제협력 다변화를 통해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공고화
- ❖ 고성능 전력증강, 국방기술력 제고, 비전통위협(재난·테러) 대응 역량 강화 등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주요 정책성과

-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 동력 확보 노력 지속
 -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21.9월) 계기 한반도 영구적 평화와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및 협력 촉구
 - * 美 연방하원의 한반도평화법(종전선언, 북미 이산가족 상봉 등) 발의(11월) 성과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21.7월), 동해북부선 철도(강릉~제진) 복원 추진('21.12월 착공) 등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기반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교류 제한에도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 지속,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성('21.11월) 등 보건의료 협력기반 구축 노력
 - * 국내 민간단체 인도협력사업에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금 100억원 지원 의결
 - ** 정부, 의사협회 등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UNICEF 등), 국제 NGO, 전문가 등 구성
 - 「통일국민협약안*」 채택('21.6월), 남북대화 50년 기념사업**,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8회) 등을 통해 통일·평화 공감대 확산
 - * '18~'21년간 총 60여회, 6천여명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
 - ** 50년 기념식·학술포럼, 남북대화 화보집, 대학생 모의남북회담 경연대회 등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22년 국방예산 54.6조원(전년대비 3.4% 증액) 편성,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F-35A)와 SLBM 탑재 중형잠수함을 전력화하는 등 국방력 강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21.4월), 국방연구개발 투자 예산 확대*, 무기체계 국산화 제도** 도입 등 국방 R&D 혁신 환경 구축
 - *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억원) : ('18년) 69 → ('19년) 200 → ('20년) 580 → ('21년) 1,204
 - ** 한국산 우선구매제도(8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제(6월), 국산개발부품등록제도(7월)
 - '국방신속지원단' 제도화로 군의 대민지원 기반 마련, 관군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21.1월, 서울·용인시) 등을 통해 재난·테러 등 비전통위협 대응역량 강화

□ 국방환경 개선으로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공무상 부상 민간치료비 지원 확대*, 육·해·공군 내 인권센터 구축, 자기개발·주거지원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 (기존) 건강보험 70% 본인부담 30% → (개선) 건강보험 70%, 국가지원 24%, 개인부담 6%
 - ** (자기개발) '20년 80억 → '21년 235억, (전월세 지원 기준액) '19~'21년 1.64억 → '22년 1.82억
- 군 사법제도 개혁*으로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급식체계 개편**, 여군 보직 확대 등 군 복무여건 개선
 - * 입대전·비군사범죄의 민간이관,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21.8월)
 - ** '先 식단편성, 後 식재료 조달 체계'로 개편하고, 군 급식 수의계약 단계적 폐지(~'24년)

□ 주변국과의 빈틈없는 외교로 협력관계 지속 강화

- 美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타결('21.3월) 및 「미사일지침」 종료('21.5월) 등 성과 거양
 - * 정상회담('21.5월) 외 외교·국방 장관회의, 외교장관회담(7회), 외교장관 통화(3회) 등
- '한중 문화교류의 해('21-'22년) 선포,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21.8월) 및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1-'25년) 채택 등 한중 양국간 교류 활성화에 주력
- 對日 투트랙 기조를 유지, ▲과거사 문제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등 이슈에는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양국간 경색 해소를 위한 소통 지속*
 - *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축하서한 및 정상통화('21.10월), 외교장관회담(2회), 외교장관통화(1회) 등
- 신남방 국가들과 7대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신북방 국가들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합의(8월 카자흐, 9월 몽골)
 - * 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인프라, 미래산업, 비전통안보 ('20년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내용)

□ 경제·방역·기후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적 위상 공고화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20-'21년), 우리 정상 최초로 5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기조연설 등 국제사회 내 주도적 역할 확대
- 방역 모범국으로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백신 공여*, 코로나19 대응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에 기여
 - * 베트남 139만 회분('21.10월, 11월), 이란 100만 회분('21.10월) 등 4개국 대상 총 340만 회분
 - ** ('20~'21년) 의료시설 개선 등 5,400만불 규모, 진단키트·산소발생기 등 1,337만불 규모 지원
- P4G 서울 정상회의('21.5월) 성공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1.11월)시 상향된 기후행동 목표 발표* 등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 공고화
 - * 대통령,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제시: 26.3% → 40%

개선·보완 필요사항

□ 남북 교류협력 기반 지속 강화

-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북한의 미호응으로 북한 개별관광,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남북 협력사업에 난항
- 이산가족 상봉, 대북 인도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 민간교류·협력도 실질적 성과 도출이 미흡

☞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전준비 철저 및 남북간 인도적 차원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제안보 분야 외교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미·중 갈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 변화가 예상

☞ 수입의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동시에,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외교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발전

- 잇단 국내 방산업체 해킹사고* 발생 및 랜섬웨어 공격의 지능·다변화로 국내 핵심안보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

* ('21.5월) 한국항공우주산업-KF21 전투기 개발, ('21.10월) 대우조선해양-3000t급 잠수함 건조

☞ 민·관·군 사이버안보 협력체계 공고화 및 산업보안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필요

□ 군 장병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

- 병영 내 성폭력 및 고충처리, 부실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쳐 군 장병의 인권 침해사태가 지속 제기

* 부실급식 문제 제기(5월, 12월), 특별신고기간(6월) 내 성폭력 사건 80건 접수 등

☞ 성폭력 등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 및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군 복무여건 개선 노력 필요

2. 규제혁신 (1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평가하여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국민 체감도 제고

□ 평가대상 및 내용

- (대상) 3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1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14개)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해경청, 원안위

* 규제 심사·정비 과제, 업무성격 등을 고려 10개 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내용) 각 부처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및 국민체감도, 각종 규제혁신 제도 운영 성과 등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 달성율 등

-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19명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 3,900여명 대상 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지표	비중
규제혁신 노력·성과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	60%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효과	
	• 민생 규제혁신 노력·성과	
	• 민생 규제혁신 효과	
규제혁신 제도 운영	• 국민소통 및 규제챌린지	30%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1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C	법무부, 여가부, 보훈처, 공정위	소방청, 기상청, 원안위

'21년도 주요 성과

- (규제혁신 플랫폼)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 챌린지 등 각 제도별 성과를 확대하고, 규제전주기 관리도 강화
 - 규제샌드박스 신규 승인*(228건) 및 안전성 검증과제 제도화('19~'21, 136건)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며 규제혁신 로드맵**도 지속 확대
 - * (과기부) 지역케이블TV 활용 상품 판매 (식약처) 건강기능·일반식품 결합제품 판매
 - ** (해수부·해경청) 자율운항선박 로드맵 마련 (국토부) 자율차 로드맵 개선·보완
 - 규제챌린지를 통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성과 지원**
 - * (복지부) 인간대상연구 등 동의요건 개선 (국토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 ** (중기부·식약처·조달청·기업)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 규제비용관리·일몰제도 등 규제품질관리 지속
 - * 규제비용관리를 통해 약 2,700억 원 규제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69건 정비
- (분야별 규제혁신) 신산업 핵심규제* 및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반의 불편·부담규제** 정비
 - *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지원근거 마련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 ** (산업부) 대구·광양 산단 입주업종 확대 (조달청) CCTV 등 정부물품 내용연수 적용 완화 (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 허용 (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허용
 - 기업·국민 소통을 통한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 * 신산업 현장애로(63건), 기업건의과제(131건), 신문고 건의과제(253건) 등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샌드박스과 규제혁신 로드맵의 분야 확대 및 정합성을 제고하고, 갈등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 강화
- 현장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고, 일상방역·인구변화 등 새로운 규제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규제혁신 플랫폼 내실화 및 규제 관리

주요 성과

□ 규제샌드박스 성과 확대를 통한 신산업 발전 촉진

- 6개 분야*에서 228건('19~'21, 총 632건) 승인으로 신제품 실증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여 투자 약 4.9조원, 매출 1,501억원, 고용 6,355명 창출

*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사례 (과기부) 지역케이블TV 활용 상품 판매 (복지부) 비대면 재활훈련·상담 서비스 (금융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행안부) 차량 뒷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결합제품 제조·판매

-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 총 29개 특구 운영 및 부산 블록체인 등 10건 과제 임시허가 전환으로 지역혁신 산업 육성 지원

사례 (강원) 정밀의료 특구 (충북) 그린수소 특구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 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총 136건)는 신속한 법령개정으로 전면 허용하고,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실시

* 사업자 법령정비요청제 신설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21.5)

사례 (고용부) 가사서비스 플랫폼 (금융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 신기술 출현 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및 네거티브 규제전환

-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21.10),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21.12)을 통해 신기술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규제개선 과제(71개) 발표

사례 (해수부·해경청)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데이터·통신 표준 마련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 31건 (국토부) Lv.4 자율차 안전·보험기준 마련 등 자율주행차 로드맵('18.11) 개선·보완 40건

-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123개) 지속 발굴

사례 (과기부) 데이터산업법 제정(21.10월)을 통해 데이터 개념 범위 확대 (산업부) 재제조 대상 품목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

□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철폐 추진

- 기업·경제단체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안한 규제를 민관 합동 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

* 입증위(건의기업·전문가 참여) → 국조실 주관 협의·조정 → 민관 합동회의 확정

사례 (국토부)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여가부) 게임 섯다운제도 개선
(복지부) 인간대상연구 등 동의요건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한 핵심분야 규제개선 추진

-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추진시 적극행정 활성화로 성과창출 지원

사례 (산업부) 적극해석을 통해 국유지에 지자체 운영 수소충전소 설치
(중기부·식약처·조달청·기업) 코로나 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금융위·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 규제비용 감축관리 등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 규제완화 및 신설·강화 억제를 통해 약 2,700억 원의 규제순비용 감축

사례 (국토부) 전세버스 등 기본차량 연장(-857억원) (과기부)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218억원)
(식약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 변경(-76억원)

- 타당성 낮은 재검토기한 도래 일몰규제 69건 폐지·개선(폐지 2, 개선 67)으로
정비율 2년 연속 증가('19년 16.3% → '20년 18.5% → '21년 21.0%)

사례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지정기준 합리화(모든분야 장비보유 → 해당분야 장비만 보유)
(산업부) 대규모점포 등 개설시 제출서류 간소화(운영관리계획 등 제외)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모빌리티, 바이오 등으로 다양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실증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된 과제는 법령정비 신속 추진

- 신기술 및 신산업 변화에 맞게 既구축된 규제혁신 로드맵을 적시에 업그레이드하고 로드맵 분야를 확대할 필요

- 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운영실태를 분석·검토하여 보완 방안 마련 필요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성과

- 신산업 핵심규제 개선 및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확대,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집중 정비**
 - 사례 (산업부) 스마트그린산단 개념·지원근거 마련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환경부) 새활용사업 환경산업 범위 포함 및 지원 확대
 - 기업 소통을 통해 **ICT융합, 의료기기 등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63건)
 - 사례 (과기부) 지하철 공유기 출력제한 완화 (식약처) SW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절차 간소화
- 기업활동 전반의 규제 부담 해소로 기업 활력 제고
 - **제조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추진**(11건), 판로 확대 및 공공조달 개선 등을 통한 **중기·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지원**(27건) 등
 - 사례 (산업부) 대구·광양 산단 입주업종 확대 (농식품부) 지역특산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 (조달청) CCTV 등 정부물품 내용연수 적용 완화
 - 주요 협·단체(240개) 등과의 **현장소통으로 기업 애로 해소**(131건)
 - 사례 (행안부)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 간소화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시 직접생산 요건 완화
- 국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 규제혁신 추진
 - **비대면 활동 일상화에 따라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 규제정비**(79건)
 - 사례 (국방부) 예비군 훈련 모바일 전자고지 (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과정 허용
 -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상 불편을 해소**(253건) 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61건)
 - 사례 (환경부) 상표띠 없는 생수병 허용 (행안부)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사진제출 생략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지역과의 소통 강화로 현장의 규제애로와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집중 발굴·정비함으로써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방역관리 일상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분야를 선정하고 개선할 필요

3. 정부혁신 (10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구성·운영
 - * (전문가평가단) 학계(16명), 민간 전문가(2명), 연구원(1명), 시민단체(1명) 등 20명
 - ** (국민평가단)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국민의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200명 선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기관의 혁신역량		•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10%
혁신 성과	참여와 협력	• 국민참여 성과	75%
		• 기관 간 협업 추진성과	
	국민체감 공공서비스	•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 포용적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	• 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 조직문화 혁신		
대표 혁신성과		• 기관의 대표 혁신 누적성과	
국민체감도		• 국민평가단·국민 체감도 평가	15%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C	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통일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부혁신 평가주관기관(행안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1년도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성과 창출 및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 강화*
 - * 국민비서 '구삐', '보조금24',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OECD 정부신뢰도 : '19년22위→'21년20위 / 부패인식지수 : '19년39위→'20년33위
- (참여와 협력)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 (농식품부) 주민주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로 악취감소 및 주민갈등 해소(홍성 원천마을)
 - ** (기상청-국토부-행안부)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성 정보서비스 개발(거창~안동IC, 220km)
- (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서비스 확대**
 - * (경찰청) 실종경위·인적사항 등을 담은 '실종경보문자제도' 시행(문자발송 297명 중 288명 발견)
(식약처) 의약품적정정보 제공으로 노인 약물 오남용 등 부적절한 처방 감소(24.6억원 절감)
 - ** (복지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도입(106만명, 827만건 안내)
- (일하는 방식)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화**
 - * (중기부) 세대간 업무노하우 공유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대화방' 운영(만족도 91.7점)
 - ** (경찰청) 범죄 위험도를 분석 및 예측하여 순찰경로 조정 등 선제적 순찰에 활용
(식약처) 위해 환경, 오염정보 등을 종합·분석한 식품안전정보지도 구축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순한 의견 제안을 넘어 국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국민참여* 프로세스 확대 필요
 - * 정부혁신 중점추진 필요 분야 : 실질적 국민참여 확대(36.7%) 1위('21.11월, 행안부)
- 개방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수준을 제고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기관 역량강화 지원 필요
 - * 법 시행('20.12월) 후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기관 간 데이터기반행정 수준 편차 확인

4 분야별 평가결과

참여와 협력

주요 성과

- 정책·예산 등 핵심과정에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국민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예산 등 의사결정과정에 국민 참여 강화
 - * (플랫폼) '광화문 1번가' 국민회원 가입 및 활동 활성화('19년 285,988명 → '21년 537,758명)
 - (예산) '국민참여 예산제' 사업 확대('21년 63개사업, 1,168억원 → '22년 71개사업, 1,429억원 반영)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 *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 현황점검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국민안전감독관 운영(64척 점검)
 - (과기부) 지역 사회문제해결 리빙랩 R&D추진(cctv 사각지대 순찰, 지하수 관정 오염 해결)
- 국민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 사회 경제적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 공공데이터 개방 누적건수('20년 55,189개 → '21년 67,441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20년 121개 → '21년 147개)
 - 기관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 * (농식품부) 국민의 안전과 위축된 외식산업 경기회복을 위해 '안심식당 검색서비스' 제공
 - (경찰청)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악성 앱을 탐지하는 '전화사기 탐지 앱' 개발(가입자 19.8만명)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생활 밀착형 협업성과 도출* 및 코로나19 극복 지원**
 - * (행안·국토부-경찰·소방청)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시스템으로 출동시간 단축
 - ** (중기부·기재부·국세청 등) 대상자DB를 사전구축하여 별도서류 증빙없이 소상공인재난지원금 신속지급(신청 후 당일 또는 익일 새벽 이체, 6일만에 1조원 지급)

개선·보완 방향

- 공공데이터의 높은 개방 수준에 비해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여,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및 지원 노력에 대한 보상 강화

공공서비스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가계경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촉촉한 사회안전망*** 구축
 - * (농식품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에게 농식품바우처 지원(중위소득 50%이하 2.8만가구)
(중기부) 폐업점포의 폐업비용 지원(1.5만명) 및 재도전 지원(24.9만명) 확대
 - **국민의 불편과 생계 위기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 서비스*** 제공
 - * (고용부) 택배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인 특고 12개 직종에 신규 고용보험 적용(50.3만명)
(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긴급돌봄지원단 운영(18,045건 지원)

- **확산되는 디지털·비대면 정책환경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개발·지원**
 - **간편하게 이용하는 모바일 기반 생활서비스 제공***
 - * (경찰청) 이동통신 3사(SK·LGU+·KT)와 연계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300만명 이용)
(고용부)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모바일 전자증명서비스 지원(207만건)
 - **거래비용 절감*, 온라인 공공서비스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익 증진**
 - * (농식품부) 유통비용을 절감한 '온라인 도매시장'(양파: 소비자가격 △62원/kg, 생산자가격 +77원/kg)
 - ** (중기부) 30여개 분야로 분산된 정보검색, 증명서 발급 등을 원스톱서비스(중소벤처24) 구현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 **데이터 수집 확대 및 ICT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 안전 강화***
 - * (해수부) 세계최초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e-Nav' 으로 해양사고 방지(20년 2,641건 → 21년 2,229건)
(산림청) 산악기상관측망 운영을 통해 산사태 예측경보 조기 제공(1시간 전 → 12시간 전)
 - **AI, 빅데이터 활용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행안부) 백신접종운전면허 갱신 등 국민 알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뵀' 운영(1,370만명 안내)
(과기부) 난치병 진단 정확도를 개선한 '닥터앤서' 개발(소아희귀질환 판독시간 5년 → 15분)

개선·보완 방향

- 국민의 편리한 삶을 지원하는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본격화** 되도록 우수사례 확산 및 **학습과 정보공유** 필요

일하는 방식

주요 성과

□ 스마트한 업무체계 구축 및 행정업무 효율화

○ 비대면 업무방식 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 (중기부) AI챗봇 등으로 정책자금 상담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화(대출기간 60일→10일)

** (농식품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개발(분석비용 40만원→1만원 / 분석시간 4일→5분)

○ 단순·반복업무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업무시간 단축 및 생산성 제고

* (고용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전환(CBT)으로 시험지 인쇄 및 운송비용 절감(△16억원)
(산림청) 국유림 사용료, 변상금 부과 반복업무 자동화(건당 소요시간 10분→30초)

□ 모든 세대가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혁신 추진

○ 효율적인 보고문화*, 수평적 사무실 디자인** 등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

* (통계청) 워크다이어트 공모전 및 1:1:1 캠페인 실시로 업무보고 간소화(청장 대면보고 29.8%→18.7%)

** (중기부) 직원이 직접 사무실 파티션 제거 및 테마가 있는 회의실 조성 등 수평적 사무공간 디자인

○ 자유로운 소통*과 혁신사례 공유·학습**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역량 함양

* (통계청) 직원간 자유로운 소통사례인 '가면토론회' 공유·확산(울산시 의회, 대전서구청 벤치마킹)

** (행안부) 중앙·지자체가 조직문화 혁신 사례 공유·확산하는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운영(7회)

□ 데이터기반행정부 시행에 발맞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체계 구축

○ 정확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 활용**

* (해수부) AI기반 어획량 카운팅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로 수산자원 보호 강화

** (식약처) 의약품 생산·수입, 공급·사용 정보 등을 토대로 의약품 안정공급 예측모델 개발

개선·보완 방향

□ 데이터기반 행정은 법 시행('20.12월) 후 제도 정착 초기 단계로 향후 기관별 공동 활용 데이터의 등록·활용에 대한 교육·컨설팅 강화 필요

대표 혁신 누적 성과

주요 성과

- 국민참여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국민이 원하는 행정 구현
 -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 * (식약처) 국민 관심사와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행('18년~, 부적합 50품목 적발 (경찰청) 지역 치안협의체 운영(3,945회) 및 '탄력순찰'('17년188만→'21년669만건)로 지역치안 강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
 - * (인사처-보훈처-법제처-행복청)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으로 예산절감('21년 92억원)
 - ** (행안부-과기부 등) 간편인증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예약시간 최대 111시간→2~3분 단축 / 시간당 30만건→200만건 처리)
-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혁신적 포용행정 확대
 -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
 -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을 못하는 취약계층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21년 40만명)
 - ** (중기부) 경영난에 빠진 우수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선정하여 밀키트 생산·유통 지원(5만개)
 - 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부담 개선*
 - * (식약처) 시청각장애인 대상 음성안내·동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정보 간편검색서비스 제공 (복지부) 돌봄 인프라의료비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운영('17년~,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72만원 감축)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생존률 80%증가('16년50초 → '21년5~10초) (산림청) 산불감지 센서, 드론 활용으로 대형산불 발생 최소화('19년653건 → '21년310건)
 - 국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 * (농식품부) 귀농귀촌 희망국민에게 '농촌한번 살아보기' 지원('21년, 599가구 참여) (통계청) 이용자맞춤 통계 제공(청년층 생활권역 통계→상권분석 / 중장년층 연금통계→노후대비)

개선·보완 방향

- 그간의 누적된 혁신성과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하고, 부처간 제도화된 우수사례 공유·학습을 통해 정부혁신 내재화 필요

4. 정책소통 [15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소통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성과 체감 확산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
 -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단」 구성 운영, 소통만족도 조사는 국조실 주관 외부 전문기관(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평가
- 분기·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정책소통 활동	주요정책협의	•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4%
	언론소통활동	• 일일보도대응	
정책소통 성과	언론소통성과	• 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외신소통활동 성과	63%
	온라인소통성과	• 누리소통망 활동성과, 디지털캠페인 성과, 온라인 현안대응	
	기관장소통성과	• 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보유매체등 활용성과	• 보유매체·KTV 활용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성과	
체감도	소통만족도	• 소통만족도, 갈등 소통	23%
	온라인체감도	• 빅데이터 분석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보훈처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정책소통 평가주관기관(문체부)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1년도 주요 성과

○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 기관장의 적극적인 언론과 현장소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기관장 활동 월평균 실적 : 장관급 기관 24.9회(전년 대비 10.2% 증가), 차관급 기관 12.9회(전년 대비 3.2% 증가)

- 잘못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바로잡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

○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협업 강화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탄소 중립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소통협의체* 운영,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 정책홍보전략회의(매주), 대변인협의회(매주), 온라인대변인협의회(격주) 개최, 정책발표 사전협의 ('20년) 212건 → ('21년) 281건, 전년 대비 32.5% 증가

** '21년 인지도 결과(한국리서치) : 코로나 19 단계적 일상회복(93.1%), 탄소중립(88.4%)

○ 디지털소통 다각화로 국민 참여 소통 확대

-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 강화로 긍정 반응 확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20년 대비 증가율 △(구독자) 유튜브 53.1%, 페이스북 12.3%, 인스타그램 54.2% △(조회수) 유튜브 44.7%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및 외신홍보 여건 다변화에 따라 부처별 핵심성과 중심으로 외신홍보 강화 필요

- 사회 다변화에 따른 융복합 정책 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소통 방식도 전략적으로 개선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코로나19 위기관리와 주요정책 성과 확산

주요 성과

□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 기관장 주도 방송 출연, 인터뷰 등 언론과 현장소통 활동 강화로 국민 불안 해소 및 신뢰 제고
 - * (복지부) 추석 특별 방역대책 및 방역체계 전환 관련 KBS 뉴스 방송 출연
 - (환경부) 페트병 재활용 업체 현장점검, 1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 참여
 - (식약처)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심사와 허가 브리핑 및 인터뷰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여 국민 관심 및 신뢰 제고
 - * (행안부·IT전문가) 디지털 뉴딜을 유명 전문가를 통해 소개
 - (복지부·변호사) 아동학대 신고 제도 및 구제정책 소개

□ 범정부 현안에 대한 부처협업 강화

-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 언론 보도 및 정책성과 확산
 - * (해수부) '해수욕장 방역대책' 관련 수용자 관점에서 메시지 전달력 강화 반영
 -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관련 신청요건 등 관심 사항 반영
-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과 활용 시 부처 역할 분담과 협업 확대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대국민 수용성 제고
 - * (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과기부·관세청) 코로나 19 위기를 이겨낸 대한민국 수출 캠페인
 - (행안부·기재부·중기부)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캠페인
 - (환경부·문체부) 예술로써 환경을 말하다 '지구를 구하는 예술인' 캠페인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내 주요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 증가 및 외신홍보 여건 다변화에 따라 부처별 핵심성과 중심으로 외신홍보 강화 필요
 - 기관장 참여, 외신 관심 맞춤형 콘텐츠와 소통행사 등 적극 활용, 외신 보도의 국내 선순환 홍보로 성과 극대화

디지털소통 다각화로 국민 참여 소통 확대

주요 성과

- 국민 참여형 캠페인 및 인플루언서와 협업 강화로 긍정 반응 확산
 -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국민 호응,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확산
 - * (복지부) 금연 관련 국민 참여형 이벤트 '노담 태그 캠페인'
 - (고용부) 취업 지원제도 관련 ZOOM 활용 온라인 설명회 및 상담 이벤트 추진
 - (경찰청) 교통법규 준수 노력 다짐하는 릴레이 이벤트 '챌린지 캠페인'
 - (질병청) 예방접종 인증 및 소감을 본인 계정에 올리는 캠페인 '고마워 백신'
 - 웹툰 작가,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콘텐츠와 영상 제작 등으로 국민의 긍정 반응 확산
 - * (중기부) 유명 웹툰 작가와 협업하여 '제2벤처붐' 대표 이미지 제작
 - (특허청) 위조상품 구매 피해사례 주제로 유명 유튜버와 콜라보 영상 제작
 - (행안부) 인기 작가와 협업하여 국민 비서 백신 접종 안내 인스타툰 제작
 - (산림청) 건강한 숲의 가치 공유를 위한 사회공헌활동가 참여 영상 제작
-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메시지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표현한 모션그래픽, 부처 대표 캐릭터 활용, 웹드라마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활용하여 국민소통 확대
 - * (금융위) 뉴딜펀드 관련 옥외 전광판 및 유튜브 광고용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 (통계청) 캐릭터 '보통씨' 활용 공익광고 패러디 K-통계시스템 소개 영상
 - (경찰청) 시골 경찰관이 근무 중 겪는 에피소드 '모두의 캡' 웹드라마 제작
 - (보훈처) 흥범도 장군 유해봉환 일정별 실시간 쇼츠(Shorts) 영상 제작

개선·보완 필요사항

- 사회 다변화에 따른 융복합 정책 과제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소통 방식도 전략적으로 개선 필요
- 다수 부처 관련 정책에 대한 범정부 통합 홍보 추진 등 협력 강화

5. 적극행정 (가점 3점)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기관별로 점검·평가하여 공직 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 지원

□ 평가대상

- 45개 중앙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제순)
장관급 (24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차관급 (21개)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평가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정량평가) 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 수준 달성시 기본점수 부여, 초과 달성시 달성 정도에 따라 상위점수 부여
 - (정성평가)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적극행정 추진성과' 항목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평가하여 합산
- * 적극행정 및 정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평가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10명
- '적극행정 체감도'의 경우 별도 용역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중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계획의 적정성, 제도개선 노력도 	8%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적극행정 이행노력도 •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교육 활성화 노력도 • 홍보 노력도 	32%
적극행정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과제 추진실적 제출 • 중점과제 적극행정 성과 	30%
적극행정 체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30%

2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식약처,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B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C	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적극행정 평가주관기관(인사처)은 등급 산정에서 제외

'21년도 주요 성과

- 「국가공무원법」, 「행정기본법」 등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마련,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시행, 기관별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등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 확대
 - * 국민이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 해결 추진('21.12월말 기준, 총 1,667건 접수, 적극적 처리 권고 92건)
 - ** (20년) 적극행정 경진대회 심사 → (21년) 기관별 중점과제 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홍보 등 참여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경험이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현안에의 신속한 대응과 성과 창출로 확산
 - * (환경부)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 (과기부)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
-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으로 해결
 - * (중기부·조달청·식약처·삼성)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 주요 지표로 보는 적극행정 >

- ▶ (국민체감도 상승)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지속적 상승
 - * 국민체감도 :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 ▶ (활발한 제도 이용)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확대
 - * 적극행정위원회(코로나外) : '19년 42건(42건) → '20년 486건(152건) → '21년 382건(237건)
 - * 사전컨설팅(코로나外) : '19년 174건(174건) → '20년 299건(151건) → '21년 259건(219건)
- ▶ (보상 확대)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로 공무원 자발적 참여유인 증가
 - * 우수공무원 선발/파격적 인센티브(명) : '19년(294/85) → '20년(934/504) → '21년(1,700/1,149)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 두텁게 하는 한편,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필요
-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정부의 적극행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간 연계 강화 필요

4 분야별 평가결과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

주요 성과

- 적극행정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제도 운영 활성화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 근거 규정을 마련,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
 - * 국가공무원법 제50조2(적극행정의 장려),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등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기관별 다양한 현안 해결에 활용
 - 사례**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활용, 113만 농가 공익직불금 적기 지원 (병무청) '사전컨설팅' 활용, 입영예정자 신체치수 사전 제공으로 맞춤형 군수품 보급
- 적극행정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
 -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시행
 - 사례** (복지부) 31만 결식 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최저 단가의 법령상 근거 마련
 - 주요정책 평가, 체험 홍보 등 기관별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참여 확대
 - 사례** (해수부) 중점과제 발굴 및 정책 평가에 참여, 적극행정 현장체험기 홍보 등
- 범정부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우대·보상으로 자발적 참여 동기 확산
 - 사례** (해경청) 항공기 항공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연간 50억원을 절감한 공무원 특별승진
 -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직사회 내·외 인식 개선
 - *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체감도 상승(직전조사 대비) : (국민) '19년 61.6% → '20년 62.2% → '21년 64.0%, (공무원) '19년 61.6% → '21년 68.5%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
- 국가공무원의 약 40%를 구성하는 MZ세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일상 속 적극행정 실천 동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민체감 성과 창출

주요 성과

□ 코로나19 위기 극복, 탄소중립 등 국정현안의 신속한 대응과 성과 확산

- 전부처 대상 **280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발굴, 격주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여 의미있는 성과 다수 창출

* 총 280개 중점과제에 대해 1,584개 적극행정 실천사례 접수, 398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등을 통해 전 기관 공유·전파

사례 (코로나19 방역) 코로나19 백신 및 백신용 주사기 안전 수송(국방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개선 지원 (과기부·행안부) 등
(2050 탄소중립) 투명페트병 재활용 확대(환경부), 국유지에 지자체 운영 수소 충전소 설치(산업부) 등
(한국판 뉴딜)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 개선(공정위), 토종 인공지능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과기부) 등

□ 행정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불편을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로 해소

- 주요정책에 대한 중점과제 외에도 **일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굴한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행정으로 해소

사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완화(집합금지 업종 추가 등)로 고용안전망 강화
(병무청) 코로나로 국내에서 국외대학(원격수업) 재학중인 자에 대한 입영연기 허용
(문화재청) 부처 협업 및 국제 지지교섭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 적극행정이 필요한 도전적 과제를 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력으로 해결

-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상의 난관을 극복하고, 부처 협업 필요사항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문제 해결

사례 (중기부·조달청·식약처·삼성) 코로나19 백신주사기 LDS 양산체제 구축
(금융위·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사)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환경부·식약처) 화장품 리필 매장 조기활성화 지원

개선·보완 필요사항

- 주요 국정현안 해결에 정부의 적극행정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과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간 연계 강화 필요

Ⅲ. 기관별 종합 평가

1 기관종합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

□ 평가방법

-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가점 3점) 점수를 합산

2 기관종합 평가 등급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C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IV. 후속조치 계획

□ 평가결과 공개

- 공개범위 : △부문별·기관종합 각 부처 '등급' (A·B·C)
△국정과제 등 부문별 주요실적,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공개방법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 포상

- '기관종합 및 부문별 A' 등급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 부문간 배점 비중 차이를 고려하여 포상금 배분
 - * **배점 비중** :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 유공 포상 30점(훈장, 포장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개선조치

- 평가시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부처별로 개선 추진